



중앙·지방정부·현장·전문가가 함께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실행력을 높인다

-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10월 15일 「천명지킴 워크숍」 개최
-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공유 및 실행력 제고 방안 논의
- 중앙·지방정부, 자살예방센터, 전문가 등 한자리에 모여 정책방향 공유

-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 이하 생명본부)는 10월 15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와 16개 광역지방정부, 자살예방센터,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천명지킴 워크숍」을 개최했다.
 - 이번 워크숍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정책 현장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그간 생명본부는 ‘사람 살리는 정부’의 구체적인 구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천명지킴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종교계·민간기업·시민단체·연예인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와 함께, 현장·결과·타겟 중심의 자살예방활동을 추진해 왔다.
 - 또한 다양한 자살유발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9대 분야별 자살예방대책도 순차적으로 마련·발표했고, 지난 10월 12일에는 「2025 국가자살예방 전략」과 9대 분야 자살예방대책을 포괄하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였다.
-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이 지역과 현장에서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행력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 이날 워크숍에서는 먼저 김현수 자문위원의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자살 예방정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이어 현장 중심

자살예방대책 수립·추진을 위한 지방정부별 자살사망 특성 통계 현황에 대해 전진아 자문위원의 설명을 듣는 한편, ‘국가자살동향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직접 시연하는 기회도 가졌다.

- 이후 보건복지부 및 과제별 주관부처 등이 공동으로 「제6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으며, 지방정부와 자살예방센터 등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정책을 현장에 잘 안착시키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관련 자료는 지방정부 우수사례 등과 함께 지방정부 및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할 계획이다.
- 한편, 지방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우수사례는 별도 자료로 지방정부 및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하였다.

- 송민섭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장은 “중앙과 지방정부, 자살예방센터 및 전문가를 포함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힘을 모아주신 결과 자살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 “이제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이 국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잘 작동하도록 중앙과 지방, 정책과 현장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사람 살리는 정부」는 결국 바로 우리 곁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 “본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부처 간·중앙과 지방 간 칸막이를 넘어 필요한 정책과 자원이 현장까지 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천명지킴 워크숍 개요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대응전략총괄과	책임자	과 장 조승희 (044-200-6366)
		담당자	사무관 연희정 (044-200-6382)

□ 워크숍 개요

- (일시) '26. 10. 15.(목), 14:00~16:00
 - (장소) 세종청사 6동 대강당(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 (참석) 총 100여명
 - 자살예방정책 자문단, 광역지방정부, 자살예방센터
 -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9대 분야 대책 주관부처*, 생명지킴추진본부
- * 복지부, 문체부, 금융위, 인사처 등

□ 세부일정(안)

시간	내 용	비 고
20'	◦ 한국 자살예방의 다른 통찰적 관점	자문위원 (김현수 박사)
20'	◦ 지방정부별 자살사망 특성 통계 현황(향후 일정 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진아 박사)
20'	◦ 국가자살동향시스템 소개	법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이상기 사무관)
20'	◦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박재우 자살예방정책과장)
40'	◦ 자유토론 및 의견수렴	